"지방대학 지원권 이양 효과적으로 대처하라"

김정수 도의원, "효과적 대응체계 미비 지방대 고유 강점 · 지역부흥 방안 고민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7일 2023년도 상반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김관영 지사 또한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대학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뜻을 밝혔는데,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의 대학 관련 정책 방향은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익산의 원광대가 예외적으로 양·한방을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지역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을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도정현안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수"

강태창 도의원, 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서 "연령별 적합 조사방법론 혼합하는 등 시도 고민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7일 2023년도 상반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도정현안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정현안 여론조사란 전북도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 시기를 정해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이 활용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다.

강태창 의원은 "이미 여론조사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 경기, 충남 등의 사례를 보면 표본의 대표성 확보 문제, 공정하지 못한 설문문항 구성, 설문결과 미반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본격적인 조사 시행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가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는 특정 연령의 응답이 치중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연령별로 적합한 조사방법론을 다양하게 혼합하는 등의 시도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4 · 5 전주을 재선거

청년 인구감소 선제 대응… 지역 · 청년 공존방법 모색

김호서 예비후보, 지역 청년들과 온 · 오프라인 해결방법 공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가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정책 마련과 함께 지역과 청년의 공존방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정책, 소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이 계속해서 머물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등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주지역 청년 인구는 18만3000여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2년 사이 9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일자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고 지원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청년들의 이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도와 전주시 등의 관련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인데다 대부분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나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 제조업 분야의 창업 지원 등 지원사업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청년 고용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고 공공 일자리 등 단기적인 일자리의 비율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전북에서 두 번째로 높을 만큼 고용 불안정성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미래를 꿈꾸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된 청년 정책을 지역 청년들과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전주시 효자동에서 열린 전북청년아카데미 사이시옷 1기 수료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전주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정된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권, 단체장 소속 정당 따라 '국가예산 차별'"

임정엽 예비후보 "대선시 역대 최대 지지율로 화답한 도민에 막말" 사과 촉구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임정엽 예비후보는 2023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차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하고 "국가예산을 통한 지역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2.49%, 전남 3.1%, 경기 1.6%로 확인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은 강원 11%를 비롯해 경북, 경남, 충남, 충북이 각 8.2~9.3%로 차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역시 역시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는 3%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 부산, 대구는 각각 7.3%, 7%, 6.9%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5.1%인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야당 단체장 지역은 평균 이하, 여당 단체장 지역은 평균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전북은 새만금 등 사회간접자본 투입 요건이 많음에도 예산은 반토막"이라면서 "국가예산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예산 증가율과 지역 배분액은 형평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예산 증가율과 배정액을 정당별로 차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고, 또다른 지역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예비후보는 "올해 전북예산의 부당 편성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무식' 운운하며 막말을 내뱉은 것은 전북도민을 무식한 집단으로 비하한 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전북도민은 지난해 3월 대선 기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역대 최대 지지율인 14.4%로 새 정부 출범에 화답했다"고 상기시킨 뒤 "정운천 후보는 명확하게 드러난 팩트에 대해 도민 비하발언을 할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도민 앞에 설명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임 예비후보는 "정부와 가교역할을 기대하며 협치를 제안한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의 깊은 뜻을 외면한 채 예산증가율의 차별문제가 불거지니까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말하고 "전북도민에 대해 국민의힘의 명확한 해명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뉴시스

12대 전주시의원 의정활동 '눈에 띄네'

의원발의 조례안 11대 대비 2배 늘어 5분 발언도 26% 증가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새로 입성한 초선의원 17명의 열의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새로 입성한 초선의원 17명의 열의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다.

7일 전주시의회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 발의로 처리한 조례안은 모두 16건이다. 이는 11대 의회 초기 6개월 동안 발의한 조례안 8건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행정에 대한 각종 비판을 통해 개선책을 찾거나 효율적 행정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5분자유발언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12대 의회 개원 후 나온 5분자유발언은 모두 46건으로 11대 의회 34건에 비해 12건(26%) 증가했다.

정당별 5분발언은 전체 46건 가운데 민주당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8건)과 국민의힘(3건), 정의당(2건)이 뒤를 잇고있다.

전주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전체 35석 중 민주당이 29석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석, 무소속이 4석을 점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천서영 의원은 "5분발언은 본회의 때마다 8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잠깐만 늦어도 발언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의원들의 열의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8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의 경우 5분발언 신청자 16명이 2주 전부터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전주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 때마다 5분발언 신청을 8건씩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번 회기의 경우 2번의 본회의가 첫날과 마지막날 열린다.

시정질문의 경우 12대 의회가 11건으로 11대 의회(13건)보다 2건 적지만,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점이 고무적이다. 11대 의회 초반 6개월 동안 시정질문을 한 초선의원은 김승섭, 박선전, 이남숙 의원 등 3명이였지만, 12대 의회 때는 최명권, 한승우, 신유정, 최서연 의원 등 4명으로 늘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시정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연소인 신유정(99년생)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7명이 초선이다보니 보이지 않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청년정치의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대 의회 개원 후 6개월 동안 열린 의원들의 정책간담회는 모두 8건으로 11대 의회 전체 운영 기간(4년) 10건에 육박해 조만간 추월이 예상되고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선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여기에 초선들의 열정이 더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은경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농업기술원 등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7일 제397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농가를 배려하는 정책이나 계획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시 연구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라북도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주문하였는데 진행상황이 더딤을 지적하고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앙공모사업에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삼락농정위원회가 농어촌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분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신설을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농업기술원이 기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요즘 트랜드에 걸맞은 SNS, 유튜브 홍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라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위험에 처해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50년에는 전체가구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기술원도 1인가구 소비트랜드에 맞춰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작물을 연구하고 시설투자를 통해 이에 맞춰가려하나 소비트랜드는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어 농가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책제안 뿐만 아니라 농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금융회사 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

민주 윤준병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록, 보고,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7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김철민·신정훈·양정숙·김성주·김성환·최종윤·오영환·조오섭·민형배·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항공안전기술원 남원 이전을"

전북시군의회 의장협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7일 항공안전기술원의 남원 이전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의장협은 이날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제272차 월례회'에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고 연내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드론과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항공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남원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기술원의 남원 이전을 촉구했다.

또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 제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의정 활동비는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1994년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각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전국 기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전주시의회 의장인 이기동 회장은 "시군 의회 의장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은 국토부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뉴시스